

1

손님초대 요리로 좋은 ‘훈제오리샐러드’

진공포장된 훈제오리고기 사용...간편조리 맛은 일품



‘훈제 오리 샐러드’는 진공 포장된 훈제 오리고기를 구입해 사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익힌 상태의 것이므로 살짝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만드는 과정도 쉽고 맛도 있지만 특히 포만감이 느껴지는 샐러드다. 또한 고추기름을 넣어 만든 매콤한 드레싱을 부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아삭아삭 씹히는 싱싱한 채소, 버터를 넣고 볶아 버터의 풍미가 살아있는 사과, 감, 건포도, 호두 등의 부속물과 함께 내면, 언제나 인기만점이라 손님초대 시 요긴한 레시피가 된다.

1. 팬을 중불로 달구고, 훈제오리를 구운 후 페이퍼 타월 위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한다.
2. 사과, 감은 껍질을 제거한 후 사방 1센티 정도의 작은 크기로 썰고, 메추리알은 삶아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잘라 줍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른다.
3. 팬에 버터를 두르고, 중불로 달군 후 사과, 감, 건포도, 호두를 볶아낸다.
4. 드레싱재료(고추기름 3T, 올리고당 3T, 다진양파 2T, 설탕 1T, 사과식초 1T, 참기름 1T, 레몬즙1.5T, 다진마늘 ½T, 다진고추 1개, 소금 1/6t, 후춧가루 1/8t)는 모두 섞어 준비한다.
5. 그릇에 베이비채소를 담고, 훈제오리와 볶은 사과, 감, 건포도, 호두를 올리고, 메추리알과 방울토마토를 올린 후 드레싱을 붓는다.

▶미주중앙일보 [2016.12.23]

2

스타들의 숨은 이색 먹거리 김밥

건강에 좋은 ‘오리안심’ 재료로 ‘인기’



최근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한 ‘연예인 식단’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몸매관리와 영양보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연예인들의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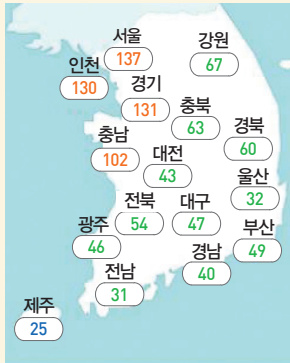
단이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자체 개발한 레시피의 프리미엄 김밥 15종과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웰빙을 고려해 뇌와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황 쌀과 오리안심, 소불고기 등의 식재료를 사용한다.

▶NSP뉴스통신 [2017.1.5]

3

전국은 지금 미세먼지 ‘나쁨’ 중금속 해독효과 ‘오리고기’ 주목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가운데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일 수도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다. 이처

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 기관지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차 종류는 녹차나 도라지차가 좋다. 또한 풍부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파래 등 해조류는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해주며 마늘은 혈액순환 촉진과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며 항산화 효과가 있는 배, 독을 중화하고 중금속을 해독해주는 오리고기도 좋은 음식이다.

▶세계일보 [2017.1.2]

4

면역력 지키는 육류별 ‘궁합식품’ 노약자 기력회복엔 ‘오리고기-도라지’ 제격

날씨가 들쭉날쭉하다. 불안정한 날씨는 생체 리듬의 변화를 불러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백질 섭취. 고단백의 영양가 높은 음식은 주로 육류에 있는데 궁합이 맞는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통 돼지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으리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의외로 양질의 건강 식품이다. 각종 조미료나 양념 등이 위산을 자극할 때 위벽을 코팅해 줄 수 있는 필수지방산은 돼지고기에 풍부하다. 그래도 돼지고기의 소화가 걱정된다면 토마토와 함께 섭취한다. 소화를 촉진하고 위의 부담을 가볍게 해 준다.

소고기는 브로콜리와 찰떡궁합. 소고기의 철

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유용한데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가 매우 적합하다. 영양의 흡수뿐만 아니라 식재료가 주는 풍미가 더 상승한다. 아이들의 이유식으로 좋다.

기력 회복이 필요한 노약자에게는 오리고기와 도라지가 특효.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는 보통 찬 성질을 가졌는데 따뜻한 성질을 가진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사포닌이 풍부한 도라지가 면역력을 증강시켜 영양도 채워주고 맛의 조합도 뛰어나다.

▶중앙일보 [2017.1.21]

2017 농업전망대회 오리 사육마릿수 2년내 AI 이전수준 회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1월 18일(수)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2017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 질서와 농식품 시장의 변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한국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도축마릿수 증가와 쇠고기 수입 증가로 지난해보다 5% 하락하겠고 돼지고기 지육가격 역시 도축마릿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3.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육계와 산란계의 경우 올 상반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AI 발생으로 산란계가 매몰 처분되면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계란의 경우 올해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6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리 사육마릿수는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년 이내에는 AI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경연은 지난달 발생한 AI로 오리 사육마릿수의 28%인 총 245만마리가 매몰 처분됐다고 밝히며, 종오리 매몰 처분 마릿수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두 개의 시나리오로 전망을 내놨다.

종오리가 현 수준으로 매몰 처분되면 올해 오리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19.9% 감소한 724

만마리로, 처분마릿수가 늘어 38만마리가 처분되면 올해 오리 사육마릿수는 전년대비 24.9% 감소한 695만마리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산지가격은 생체 3kg 기준 각각 7,295원과 8,341원으로 14% 이상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이후 오리 사육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년 이내는 AI 발생 이전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오리 사육마릿수는 1,070만마리, 2026년 1,337만마리로 추정됐다. AI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kg으로 지난해 2.3kg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농수축산신문 [2017.1.23]

6

농협, AI 피해농가 '물심양면' 돕는다

재해자금 500억 지역농·축협 43곳에 추가 지원

농협은 1월 13일(금) 허 식부회장 주재로 '긴급 범농협 AI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기간 AI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가 12일 AI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자금 500억원을 지역 농·축협 43곳에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1년간 금융자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재해자금은 AI 피해농가의 닭·오리 재입식에 활용, 농가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른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으로 농협이 지역 농·축협에 지원



한 AI 재해자금은 지난해 11월 100억원, 12월 200억원을 포함해 총 8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역 농·축협의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AI 종식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병원 회장은 “재해자금 지원이 AI 피해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AI 조기종식과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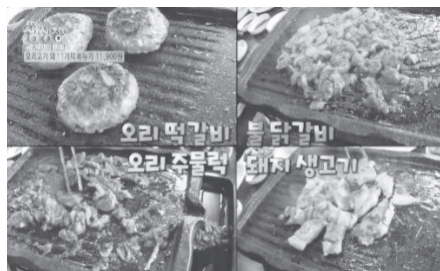
▶농민신문 [2017.1.16]

7

주머니 가벼운 분들 맘껏 즐기세요~

KBS 2TV '생생정보'...11,900원 오리무한리필 소개

KBS 2TV '생생정보'에 11,900원 오리 무한리필 식당이 소개됐다. 1월 16일(월) 저렴한 가격에 오리 무한리필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았다. 등장한 식당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곳은 오리 무한리필로 유명했다. 가격은 11,900원으로 손님들은 “이



재미도 더했다.

돈에 오리를 맘껏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며 극찬했다. 게다가 오리불고기뿐만 아니라 오리떡갈비, 삼겹살, 문어, 막창 등 11가지 메뉴까지 더해져 골라먹는

▶일요신문 [2017.1.16]

8

설날 약선음식...오리고기 떡국 신장의 음기 도우며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설날의 대표 음식은 쌀로 만든 떡국이 있다. 떡국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과 효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떡국에 들어갔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장 흔하게 넣는 소고기는 태음인에게 잘 맞으며 맛은 달며 속을 편하게 하고 기혈의 순환을 돕고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닭고기나 꿩고기는 냉증이 심한 소

음인에게 좋으며 소화가 잘 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와 혈을 도우며 근육을 강화하고 위장을 튼튼히 하게 한다.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소양인에게 좋아서 성질은 차고 신장의 음기를 도우며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며 열병에 의한 진액손상, 조열로 인한 기침, 변비에 좋다.

▶시선뉴스 [2017.1.22]

9

닭·오리고기 취급업소 특별점검

1월 9일(월)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건대 스타시티점에서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관계자가 닭·오리고기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먹거리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



울시는 1월 20(금)일까지 시내 닭·오리고기 가공·포장·판매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2017.1.9]

10

국방부, 軍 급식개선안 발표 오리고기 1회 150g, 연16→17회 공급

국방부는 '2017년 군 급식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2012년부터 유지해오던 '장병 영양섭취기준'을 개선했다.

육류·생선류·분식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

는 음식이 군 급식에 적극 반영된다. 그러면서도 단백질 섭취 비율을 높여 1일 총 섭취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군 급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뉴스 2017.1.24

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농식품부, 2년간 연장...이자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며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 및 이자감면된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용자금(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현재 정부가 농축협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시·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농축유통신문 [2017.1.17]

닭·오리 가공육 설 선물세트 '구원투수'

3~5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소비자 호응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닭과 오리 업계는 근심이 가득하다. 게다가 인체 감염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 때문에 소비자들이 닭·오리고기 섭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협유통에 따르면 1월 둘째 주까지 닭고기 판매량이 감소했고 오리고기의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닭·오리 업계는 어두운 분위기를 닭·오리 가공육 선물세트 판매로 타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닭·오리 가공육 선물

세트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닭·오리에 비해 안심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난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선호하는데, 닭·오리 가공육 선물세트는 3~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돼 호응이 좋은 상황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17.1.24]

‘AI 방역은 속도전’...신고·예찰·살처분 개선책 절실 살처분보상금 제도개편 · 비상대응인력 조직화 지적

정의당이 1월 11일(수)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AI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선 수의사들과 학계, 생산자단체,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AI 방역실태와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AI 감염 찾기도, 찾은 후 처리도 늦어 확산속도 못따라 잡았다

살처분정책은 감염농장을 빠르게 찾아내 확산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신고부터 늦어진다.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AI 바이러스는 차량이나 사람을 통해 전파된다. 고병원성 AI도 감염초기에는 타 질병과 확연히 구분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아 농장주가 망설이기 쉽다. AI 양성이면 시가의 20%를 무조건 삭감하는 보상금제도는 대표적인 지연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자발 신고한 양성 농가는 매몰비용을 자부담하지만, 주변 농가가 먼저 신고해 예방적살처분 범위에 포함되면 그렇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대형 가금농장은 매몰비용만 억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최초 발생 후 주변농가나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예찰에서도 허점이 지적됐다. 방역관이 농가 상황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채, 농장이 제공하는 닭만 검사하거나 구두로만 확인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가령 이미 AI 바이러스가 유입돼 닭 일부가 증상을 보이는 농가라 하더라도, 예찰팀의 출입을 막고 아직 건강한 닭을 검사하라고 내어준다면, 당국이 잡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송치용 수의사는 “전문인력이 농장 구석구석을 살펴 의심증상을 보인



닭을 찾아내 검사해야 제대로 된 예찰이 가능하다”며 “AI 발생상황에서는 방역관의 농장내 부예찰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속도도 문제로 지적

H5N6형 AI 발생 초기 대형농장에서 AI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인력투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처분이 지연됐다. 매몰비용을 자부담하는 발생농가가 인력을 적게 쓰거나 자체 직원으로만 살처분하다보니 열흘 이상 걸리는 사례도 생겼다. 지연되는 동안 농장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한 AI 바이러스는 추가발생으로 이어졌다.

징벌적 보상제 개편해 조기 신고 유도해야 비상대응 인력조직화 상시화 필요

이날 발제에 나선 송치용 수의사는 조기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적극적인 예찰로 의심농가를 색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 농가가 불이익을 보는 현행 징벌적 보상제도는 방역실패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염농가에 상을 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

라도 빨리 신고를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농가나 수의사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상체계가 AI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며 “AI 발생위험을 농가가 적극적으로 알리기 힘든 문제가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찰을 강화하고 대형농

장의 살처분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화된 비상 대응인력을 미리 조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농식품부도 대응인력조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4월까지 마련한 AI 방역개선대책에 비상대응인력 조직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2017.1.12]

14

축산차량 ‘관리 소홀’ 심각 ‘축산차량등록제’ 위반…‘방역 구멍’ 지적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지만,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차량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AI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 중 9% 수준인 305대가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까지 AI가 발생한 317개 농장에 출입한 차량 3,297대 중 127대가 GPS 전원을 끄고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8대는 GPS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축산차량등록제는 AI와 FMD 등 악성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인 GPS 단말기를 장착해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고 운행할 경우 축산차량등록제도는 무용지물일수 밖에 없다. 또한 GPS 미등록 차량은 소유주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돼 본래 취지인 역학조사 시간 단축 및 전염병 통제 효과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GPS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끌고 다니거나, 농장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차량등록제 도입 전부터 예견됐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신문 [2017.1.20]

양계농가 분산배치, 축산대기업에 방역세 부과 추진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AI관련 '4월 대책발표'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되풀이되지 않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가축질병 선진화 종합계획'은 AI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AI 휴업보상제가 실시되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농가가 이전하도록 유도하면 전국적으로 가금류 농가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 점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 상습발생지, 겨울 오리사육 금지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주변의 AI 상습발생 지역에서는 겨울철(11월~이듬해 1월)에 일부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가을철에 가금류를 미리 도축해 정부가 구매하거나 농가 소득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일단은 오리가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잠복기가 4~5일로 긴 오리는 'AI 불쏘시개'로 불릴 만큼 AI 확산세가 강력한 편”이라며 “AI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금지해 오리의 AI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북 음성, 전남 나주·영암 지역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휴업보상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닭은 휴업보상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란계는 AI 잠복기가 1

~2일 정도로 짧은 데다 통상 80주 이상의 성장을 거쳐야 하고 육계는 AI 피해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AI의 피해가 산란계에 쏠려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 가금류 사육농가가 밀집돼 있는 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가 빈발하는 철새 도래지 주변의 양계 농가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규모가 작았던 일본의 사육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의 아오모리(靑森) 현에서는 AI 발생 농가 주변의 10km 이내에 있는 농가가 7곳에 불과하다.

닭을 우리에게 뺄뺄하게 가뉘 키우는 밀식사육도 뜯어고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밀식사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닭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정하고, 농가 비용 부담이 커지면 이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 대기업도 방역세 등 방역 부담져야”

대기업의 위탁을 받아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와 대기업 간 불공정 계약에도 메스를 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대기업에 일종의 '방역세'를 걷을 계획이다.

현재 오리 및 육계 농가의 90% 이상은 축산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병아리를 위탁받아 키운 다음 출하하는 '계열화 농장'이다. AI가 발생하면 방역 시설비와 인건비, 도살처분 비용 등은

농가가 부담하지만 도살처분 보상금은 축산 대기업에 돌아간다. 가금류 소유자가 법적으로는 축산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현재 업체와 농가가 도살처분 보상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불합리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축산 대기업들에 일종의 방역세를 내게 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자들이 계란 집하장(GF)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계란 유통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에는 약 50곳의 민간 집하장이 있고, 이를 통해 유통되는 계란은 전체

의 3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수집해 판매하거나 농가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로 유통된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계란 수집차량이 농가를 헤집고 다니면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맹탕 소독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효력이 미흡한 약제 명단이 공개되고 공급업체의 허가도 취소된다.

▶동아일보 [2017.1.24]

16

“무허가축사·AI 등 축산현안 슬기롭게 대처”

2017년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농협·축산단체 합심



화상회의실에서 ‘2017년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농협과 축단협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를 비롯한 농협사료·농협목우촌 대표 등 임원진과 이병규 축단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장,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덕담과 함께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했다.

김병원 회장은 “축산업이 규모화·전문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월 19일(목) 농협중앙회 본관

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그러나 세계 축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무허가축사문제, 축산냄새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농협과 축산단체, 언론이 같이 풀어가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병규 회장은 “축산강대국과의 무한경쟁시대에 무허가축사 문제로 축산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각종 축산현안 해결을 통해 축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국민에게 우리 축산물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전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대선을 대비한 정책건의 발굴 TF 구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AI 조기 종식 및 관련산업 피해대책 마련, 육가공 제품개발 확대를 통한 산업 육성 등을 농협과 축단협에 건의했다.

▶농수축산신문 [2017.1.23]